

언론도 방통위에 ‘세뇌’ 당했나?

700MHz 언론보도 도마위에 올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통신진영,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진통신사로 분류되는 <디지털타임즈> 등을 위시한 일부 매체에서 연일 방통위와 통신사에 세뇌된 듯한 보도행태를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다.

이날 <연합뉴스>와 <뉴스시> 등 일부 매체는 오전 8시에 일제히 기사를 송고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를 통신에 우선 할당한다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는 명백한 ‘오보’이며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주파수 관련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 즉 전부터 방통위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받아 적은 기자들이 업무보고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사를 송고한 것이다. 언론사의 오랜 관행이 이 같은 대량 오보 사태를 일으킨 셈이다.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킨 매체는 <디지털타임즈>였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30일 ‘방송권력에 휘둘린 주파수 정책’이라는 제호 아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만 통신에 할당하는 것은 통신사업의 고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DTV 전환 이후 약 10조 원의 가치가 있는 228MHz에 예비용으로 72MHz를 활용하는 지상파측이 700MHz에 눈독 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700MHz는 전세

계적으로 봐도 통신에 할당되는 것이 맞다”고 말을 맺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론이다. 우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디

미디어랩 법안 초읽기

종편 웃고, 최시중 웃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이번달 5일 밤 10시 37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미디어랩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이번에 처리된 미디어랩 법안을 살

지털타임즈> 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게다가 228+72씩의 계산방식은 해당 기자가 주파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인데, 해당 기사에서 방송 예비용이라 주장하는 72MHz 쪽, 즉 채널 2~13번은 DTV 전환 이후 지상파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DMB나 디지털 라디오,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활용하는 채널 10번도 포함되어 있다. 또 72MHz에 해당되는 채널 2~13번과 228MHz에 해당되는 14~51번은 각각 VHF, UHF 대역으로 호환이 어렵다. 즉 72MHz는 방송이 활용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108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방통위와 통신사들의 ‘세뇌’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기자와 접촉한 결과, 관련 기사 중 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나온 이야기’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진통신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행태와 일반 언론사의 오보사태는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통신사들은 전 세계 최초로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 할당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같은 논의가 폐격대자 적잖이 당황한 듯 하다”고 전하며 이번 ‘사실 왜곡 보도’의 이면을 진단하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퍼보면 △종편의 미디어랩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입’로부터 3년 유예, △1공영(KBS, MBC, EBS) 다민영(SBS, 종편)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미디어랩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신년사

양 창 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창게 비상하는 흑룡의 기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연합회원 여러분!

소의 우직한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앞을 보고 달려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인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명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의 기술 속에 ‘우보천리’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아울러 2012년을 맞이하는 연합회의마음가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합회도 올해 한 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한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제시 새로운 방송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길 것이며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사들의 경쟁논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그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여 남은 디지털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방송기술 분야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정책적 패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더 나아가 발전적인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연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방송기술선도국가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 인력의 현실화를 위한 끊임없는 의견개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연합회원 여러분!

연합회는 올해로 스물다섯 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합회는 KOBAG을 컨퍼런스 등을 통한 방송기술 사업을 필두로 방송과 기술, 방송기술저널을 통한 끊임없는 방한체제 여기에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교수연구반 뉴미디어 연구반 신설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에 ‘음향기술상’과 ‘영상기술상’이 신설되어 방송기술인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잘 알기에 연합회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신발끈을 조이고 앞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새해 첫날 수평선을 가득 메운 새로운 미래의 기대처럼 올 한해에도 모든 분의 가슴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obeta.com

방송기술저널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700MHz 주파수 할당, DTV 이후로 유보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기자회견 열려

방송기술저널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방송기술정책 격주간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정책 전문 언론지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방송기술저널은 국내 유일의 방송 기술 정책 전문지입니다. 언제나 방송 기술분야의 빠르고 정확한 현안들을 분석하고 알려며 생생한 몸의 흔적이 배인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보도합니다. 또한 <방송기술저널>은 방대한 데이터와 현안 및 특징, 그리고 기고문을 비롯해 트위터와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달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뉴스를 엄선해 대한민국 방송 기술정책의 새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KOBAG



사설

여론전의 희생물이 된 700MHz 주파수

2012년 새해를 맞이해 교수들이 꼽은 희망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고 한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불가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격언이다. 그런데 최소한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에 대해서는 파사현정이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친통신 언론사들의 '교묘한 여론전'이 극성을 부리는 지금, 파사현정(破邪顯正) 보다는 귀를 막고 종을 훑친다는 뜻의 엄이도종(掩耳盜鐘)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여론전의 실태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는 DTV 전환 이후 회수할 수 있는 '필수 주파수'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누차 강조하지만 난시청 지역 해소 및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온전히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를 둘러싼 '여론전'이 격화되며 일부 언론사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아님 말고' 식의 기사남발이 만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디지털타임즈> 2011년 12월 30일자 1면에 실린 '방송권력에 휘둘린 주파수 정책'이라는 기사는 그 정점을 찍는다 하겠다. 이 기사에 따르면 '12월 29일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를 통신에 우선 할당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700MHz 전체가 통신에 할당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방송사는 약 10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주파수를 공짜로 쓰면서 추가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호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잘못된 '팩트 전달'이다. 우선 방통위 업무보고 당시 주파수 관련 현안이 거론된 적 자체가 없었으며 따라서 40MHz 우선 할당 등의 주장은 공신력을 잃게 된다. 또한 700MHz 대역 주파수가 세계적으로 통신에

할당된다는 근거는 사상초유의 거짓말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 700MHz 대역 전체를 통신에 할당한 사실자체가 없다는 것을 상기해볼때, 이는 아주 질 낮은 '루머'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타임즈>는 이런 오보 투성이의 기사를 1면에 내걸고 관련 주장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일까. 간단하다. '명문화를 통한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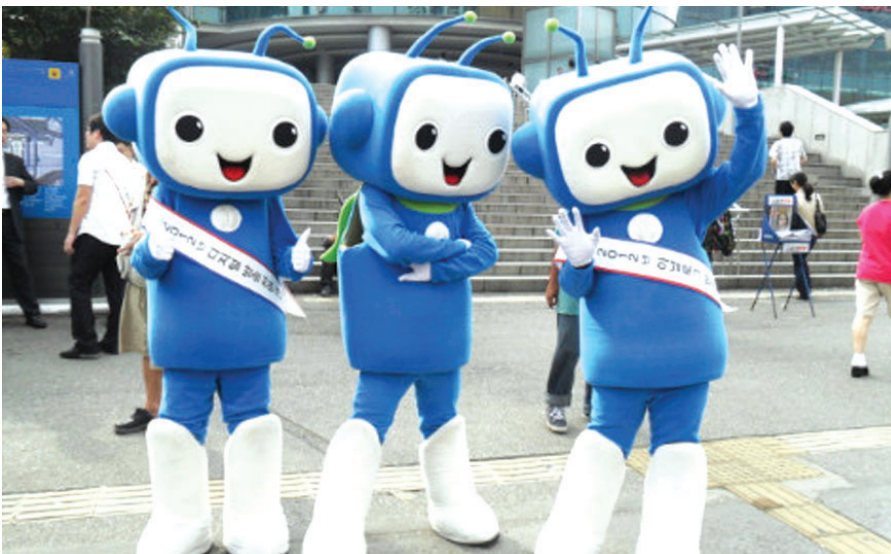
공공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4년 디지털 전송 방식 선정 당시 미국식을 택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 와서 700MHz 대역 전체가 통신에 할당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통신 기술의 갈라파고스를 운운하는 방통위와 통신산업의 주장은 허탈할 정도다. 해당 주파수를 둘러싼 현안들은 여전히 안개속이며, 시계제로의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파 진영이 나서야 할 때다. 통신산업의 여론전에 대비해 올바르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논리적으로 반격을 해야 할 때 인것이다. 지금 통신산업과 방통위는 호도된 진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모자라 업무보고 당시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주파수 현안을 들먹이며 잘못된 주장을 진실로 둔갑시켜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연합뉴스>, <뉴스시> 등 많은 언론사들도 29일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8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 통신 우선할당'이라는 예측기사를 마구 뿌리는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잘못된 여론'이 진실을 물어버린다. 그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주장과 합리적인 대안이 우선하는 주파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다.

2012년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해다. 아무쪼록, 공공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상식이 되길 기대해 본다.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직접수신가구 100% 지원 목표



앞으로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에 대해서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 설치비용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가

를 소득 하위 5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 금액도 4만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을 직접수신(유료 방송 시청자 제외)하는 가구에 대해 컨버터 대여비 6만 원 중 4만 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설치비용 9만 원 중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가구는 컨버터 대여비 2만 원과 안테나 설치비용 3만 원 등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의 외연적 확대를 꾀한 모습이다.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 3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그중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고 천명한 만큼, 지원 사업의 속도에도 박자를 가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1월부터 매일 자막고지방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이상 지역'부터 가상중료를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디지털 TV도 2종의 모델을 추가하여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디지털 전환 추진 동력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직접수신률 상승은 지상파의 의무

디지털 전환을 앞둔 2012년, 직접수신률 제고는 지상파의 '의무' 사항이라는 주장이 힘을얻고 있다.

직접수신은 한 마디로 가정에서 별도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수신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수신률은 채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가치에 제동을 걸고 지상파가 활용하는 주파수의 가치를 폄하하는 주장이 터져 나오기도 이 '직접수신' 문제가 '원죄'로 걸려있어 효과적 인 대응을하지 못하는사태가 태반이다.

이는 700MHz 대역 필수 주파수 확보를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과 통신사 간의 할당 주장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디지털 전환을 앞둔 지금 '직접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방송사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소한의 직접수신 환경이 구축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이고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 해당 수치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와 사

례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채널방송' 분야로 문제를 국한시켰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채널방송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게다가 지금까지 아날로그 TV 시절에는 신호 자체가 열악했기 때문에 채널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채널방송의 본격적인 가동도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기지국과 유선망이 끊어진다면 수신킬로 밖에서 날아오는 지상파 방송 신호는 '생명의 신호'가 될 것이다. 작년 여름, 폭우가 서움을 덮쳤을 때 케이블 유선들이 유실되고 기지국이 침수되자 직접수신이 불가능한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채널방송 분야에만 문제를 국한하지 않아도 직접수신률의 제고는 지상파 방송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지상파제'임에는 변화가 없다. 작년 11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2011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에서는 모든패

널이 이구동성으로 지상파의 무료 다채널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수신률을 끌어 올려야한다는주장을 펼쳤다. 그것이 바로 지상파의 공익적인 자세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현재 KBS의 경우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96%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할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시청 지역 해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SO들이 재송신 분쟁을 일으킬때 '난시청해소에는 지상파의 공로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문제해결의 길은 요원해보인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유선방송에 가입하거나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직접수신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바로 이것이 직접수신률 제고와 지상파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핵심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최시중 양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냐"(신진 민주통합당 의원)
"5일 논평 중 中... 뜯음없지만 요즘 중고등 학생들도 x동생, y오빠 한다면데...위원장님 트렌드 따라가는 센스가 대박이십니다. 노스페이스 사입으실 거세."

"박근혜,미디어랩 법입장 밝혀라"(언론노조,통합민주당 의원)
"지난달 21일 국회 기자회견 中... 박근혜 비대위원장님, 또 숨어계실 겁니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치한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즈 12월 30일 1면 기사)
"‘방송권력에 휘둘린 주파수 정책’ 기사 中... 이런 거짓말, 이제 지적하기도 지칩니다. 기자님 주파수가 뭔지는 아시는거죠? 먹는거 아닙니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준비해야 할 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야말로 방송의 미래며, 향후 건전한 미디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라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디지털 전환을 1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0MHz 대역 필수 주파수의 회수라는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여기서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의 발전을 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한 노력, 종국에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대전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1년 앞둔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을 마무리하고 난시청 해소와 직접수신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프리뷰'를 통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그 결과 직접수신률이 종전 5%대에서 5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동시에 사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방송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재송신 대가 협상 또 '경보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최측근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새해 첫 전체회의를 19일로 연기했다.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 한국방송에출신홍원 이사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최 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씨에게 건너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 씨가 케이블 업체와 통신 업체로부터 각각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사태 진화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전체회의가 미뤄짐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재송신 대가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상파 방송은 신규가입자 1인당 콘텐츠 사용료

(이하 CPS) 280원을 시작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케이블 측은 1인당 100원 이하가 아니면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가 중심을 못잡고 있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은 "지난 3년 동안 양측의 소송과 관련된 5차례의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방통위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위법행위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금의 중재 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재송신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TV를 보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 난민'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5일 채널 재배치 작업에 들어간 전남 강진에서 다수의 가정이 채널 재설정을 하지 못해 TV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는 더 증폭되고 있다.

전남 강진은 이미 제작년 10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지역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15일 채널 재배치 작업을 하면서 일시에 기존 채널 송출을 중단하자 채널을 미처 변경하지 못한 가구들이 발생한 것이다. 채널 재배치란 30~300MHz(2~13번 채널, 470~806MHz(14~69채널)를 쓰고 있는 현재 방송 채널을 470~698MHz(14~51번 채널) 주파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의 송·중계소에서 이처럼 채널 재배치를 하면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에서도 개별적으로 TV 수신기의 채널을 재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가구들이 채널 재설정 방법을 몰랐다는 데 있다.

DTV코리아는 "정부가 뉴스, 자막고지, 안내문 등을 통해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알렸지만 홍보와 인력 부족으로 대다수 가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DTV코리아는 이어 "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대부분이 기술적 약자인 노인"이라면서 "이들 대다수가 리모컨을 작동해 채널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1개 팀을 구성해 직접 수신 가구전남 강진 전체 가구 중 69%인 1271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일이 채널 재설정을 해줬다고 한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채널 재배치 작업 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강진 같은 경우에는 5개 채널 중 절반인 1~2개 채널만 나오지 않아서 각 가정에선 '방송사고'인 줄 알고 미처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년에 채널 재배치 작업을 하면 지역마다 5개 채널 다 안 나오는 경우, 절반만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어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나 LG

전자 등 가전사마다 방법이 달라 생기는 문제도 있어 이 역시 가전사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지와와 보급률은 높았지만 실제 디지털 방송 난민이 대거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지율이 100%에 가까웠던 일본의 경우에도 아날로그 신호가 중단되자 국민들의 불만신고가 17만 건 이상 쇄도했고, 일본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도 불만전환 전환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선 모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디지털 전환 이후 TV를 못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사례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1200년 5월 20일	
발행인	양창근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조	윤현철
취재기자	백선하 최진홍
기획실	김동균
인쇄인	이은혜
주 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장기등록번호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방통위 위기설 다시 ‘솔솔’

측근비리 의혹에 구설수, 해체설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래적인 난국에 직면했다. 최근 방통위의 잇따른 정책적 실패와 로드맵 부재, 여기에 측근비리 의혹과 종합편성채널 추가 해택 구설수에까지 휘말리면서 방통위 ‘무용론’에 이은 ‘해체설’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다. 첫 포문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었다. 당시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에게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로드맵 부재와 몇몇 부하직원의 비위사실, 여기에 산적한 이수 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사실 등을 꼬집으며 최 위원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어 무리한 주파수 경매 추진으로 국민적 비판을 온 몸으로 받아내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특혜논란에 이어 친통신 위주의 정책수립, 그리고 지상파-케이블을 재송신 협상에서도 제 역할을 충

실패 해내지 못하는 등 ‘중재 능력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해를 넘긴 2012년 현재, 방통위는 벽두부터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렸다. 바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하 한예원)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한국일보>에서 최초 보도한 이 대행 ‘스캔들’은 김학인 한예원 이사장이 EBS이사직을 지원하며 최 위원장의 측근에게 뇌물을 건넸고 그 돈이 고스란히 최 위원장에게 흘러들어왔다는 요지다. 현재 최측근인 정용욱 씨는 풀연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간 상태며 방통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인 한예원 이사장 비리사건과 최 위원장과의 뇌물공여를 둘러싼 <한국일보>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

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뇌물공여 사건은 이상득 의원 뇌물공여 의혹과 많이 닮아있어 그 결과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최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신규 및 기존 방송사들간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조성할 것”이라며 방송법을 개정할 의지를 내비친 것은 사실상 종편에 대한 추가적인 해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는 지난 달 29일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에 실제로 방통위가 방송법까지 개정해 추가적인 종편특혜를 시도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기 방통위 출범 후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방통위는 위원장 중심의 지나친 의사결정 권력 집중화를 보여주며 ‘위원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점에서 방통위 해체론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격랑에 휩싸인 미디어렐

(1면에 이어)당초 미디어렐 법안을 둘러싼 현안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안개와도 같았다. 작년 말 SBS에 이어 MBC가 자사 미디어렐을 공식 선언한 직후, 여야가 해당 법안에 합의안을 내놓는 등 미디어렐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었다. 그런데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민주연론 시민연합(민연론) 등 시민단체들의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여야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현실화를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안을 미디어렐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카드를 꺼내자 정국은 급속도로 경직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현실화 소위 구성과 미디어렐 법안 동시 처리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논의할 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라며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전채희 문방위 위원장에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권상정을 주문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렇게 전체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견해차이로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밤 10시 30분 경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렐 법안 처리와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이 동시 상정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와 이해 관계자들의 섟병도 복잡해졌다. 우선 KBS의 경우 미디어렐 법안 자체에 대한 실익은 없지만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물꼬가 트인 점에 있어 한시름 놓게 되었고 자사 미디어렐을 주장한 MBC의 경우 해당 법안대로라면 공영 미디어렐에 편입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그리고 SBS의 경우 지주회사의 미디어렐 출자가 금지되긴 했지만 본사에서 주식을 매각해 미디어렐을 추진하는 길이 열렸고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로 충분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한시름 놓은 상태다.

문제는 종합편성채널 특혜 부분이다. 종편은 이번 미디어렐 법안 처리로 최대 2년 6개월 동안 직접광고영업의 길이 열렸으며 그 후에도 자사 미디어렐을 통한 영업이 가능해져 이번 법안 처리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도 기업에 약탈적인 광고营업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숨통’이 트인 것은 물론 향후 유연확장을 위한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CJ E&M이 종편의 저조한 영향력에 자신감을 얻어 모든 자사 PP의 광고료를 100% 인상하기로 하는 마당에 종편에 더 이상의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측근의 뇌물수수 혐의로 곤경에 빠진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모든 관심이 미디어렐 법안 처리에 쏠려있는 탓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국회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대대적인 질문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분간의 신변보호를 끝내는 것으로 해당 논의는 일단락 되었다. 또 입장이 갈린 연개련과 민연론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이번 미디어렐 법안 처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추후 행동지침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디어렐, 어디로 가나

연개련과 민연론 미디어렐 의견충돌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 매대행사법(이하 미디어렐법)을 두고 정당·언론계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일 한나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렐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렐 의무화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KBS·MBC·EBS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 체제 유지 △민영 미디어렐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 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3년간 허용하도록 유예해준 부분이다. 방송광고 시장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가운데 두고 어느 한 쪽은 직접营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어느 한 쪽은 한쪽 다리를 묶어놓고 경쟁하도록 해 처음부터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44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킹은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렐 제정의 원칙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거의 수용함으로써 아랑곳도 없었다”면서 “이 법안이 분회의에서 처리되면 종편의 약탈적인 광고营업은 합법화되고 광고시장은 ‘1사 1법’의 파행적인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렐 법안의 재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렐 의무 위약 △1공영 1민영 △방송사의 미디어렐 소유지분 최소화 또는 금지 △광고취약매체 지원 등을 입법 원칙으로 정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이 제정한 ‘종편 미디어렐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미디어렐

최대지분 40%’ 등이 담긴 안을 수용하면서 양분되는 구조로 갈라졌다. 민주당합당은 이번 미디어렐 법안이 한나라당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에 따른 중소방송사들의 고사 등을 우려해 일단 입법에 합의하고, 총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지역방송협의회·종교방송협의회 등도 민주통합당의 방침에 따라 ‘선 입법 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종편, 얼마면 되겠니? 80억?

작년 1월 1일 개국한 이래 저조한 시청률로 철저히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있는 종합편성채널과 해당 신문사가 ‘돈의 논리’에만 휘둘려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득의 톤스타공매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하나금융이 채널A에 80억 원을 투자한 뒤 동아일보의 눈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집행위원에 따르면 최근 톤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에 대한 행정조치로 톤스타에 6개월간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한 ‘단소처분명령’은 보수매체의 입김에 휘둘린 금융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이며 여기에는 80억 원을 채널A를 통해 투자받은 동아일보의 여론전이 한몫했다는 것이다. 당시 먹튀 논란이 일었던 톤스타 사건은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이며 현재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부터 지면을 통해 줄기차게 톤스타에 대한 당국의 징벌적인 강제처분을 주장하던 동아일보가 최근 논지를 18도 바꿔 단소매각명령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금융의 인수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다. 김득의 집행위원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돈의 논리’에 휘둘린 보수매체와 종편의 단상이며 모두가 짐작하듯이 눈조가 바뀐 시점은 80억 원이라는 투자비용이 오간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금 하나에 신문의 논지를 바꾸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언론 생태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에 지상파 수준의 광고비를 요구하는 종편의 배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통위, 또 선물 꾸러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총 47개 개혁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주파수 이용료 인하와 케이블 TV 권역제한 폐지, 그리고 무선랜 주파수 대역 확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규제개혁안은 단연 통신사들에 대한 ‘주파수 사용료 인하’ 부분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경매 참여에 대한 부담이 생긴 만큼 통신사들의 신규투자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전파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그대로 규제개혁안에 반영되었는데 아직 정확한 인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용료 인하는 물

론 사업 금지행위를 했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은 물론 해당 행위의 경중을 감안하는 것으로 가늠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신사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방통위가 ‘지원사격’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울러 통신사들의 주파수 이용료 인하 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1년 앞둔 지금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즉, 주파수 할당 정책에 있어 방통위의 ‘친통신’ 위주의 판단을 내릴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케이블 TV 권역제한 폐지 부분이다. 이는 케이블 업체가 지금까지 즐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으로, 방통위는 현재 특정 케이블 TV SO가 전국 77개 권역 중 약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을 9월까지 고친다는 복안이다. 이에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던 SO들은 대대적인 M&A를 통해 외형을 불리는 한편 유료방송의 ‘공문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또한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사업적 위기를 맞을 확률이 높은 케이블 업체들을 위해 방통위가 대대적인 선물을 준비한 것이며 그 실효성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통신 주파수 할당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군 통신용으로 이용해 오던 1.8GHz 주파수 대역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최근 군 전용 주파수로 사용돼왔던 1.8GHz 대역 70MHz 폭을 4G LTE 서비스용으로 공유해 활용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GHz 주파수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기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가지고 있던 20MHz 주파수에 군용 주파수 대역까지 포함돼 총 110MHz 대역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이 대역은 군 전용 통신망으로 독점 사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방통위가 군 전용 주파수를 공유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파수 혼선이나 신호 간섭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군대에서 활용하는 주파수를 통신사의 편의를 위해 공동 할당 하는 것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즉, 한반도

정치지형의 특성상 아무리 통신발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군에서 1.8GHz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희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지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 사용하는 와이파이라든군과 이동통신이 해당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이나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회수-재배치’로 일원화되어 왔던 주파수 정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유’ 정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용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자원을 공유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파수 확보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지국 제한지역과 출력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발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단신뉴스

KT가 1.8GHz 대역의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에 따라 LTE 시장은 기존 SK텔레콤·LG유플러스 양자 구도에서 KT를 포함한 3자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뒤늦게 LTE 시장에 뛰어들 KT는 LTE 서비스 품질 경쟁력 등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G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추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아직까지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약 9만5000명에 이르고 있어 KT의 2G 서비스 완전 종료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용 디지털TV’에 삼성전자(주) 22형·26형 제품과 LG전자(주) 23형·27형 제품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22형과 23형 디지털TV는 2011년 지원용으로 채택된 제품과 동일하고, 26형과 27형 디지털TV는 2012년 지원용으로 처음 선정된 것이다. 30인치 이상 보다 큰 디지털TV를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일반계층의 디지털TV 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도에 선정된 32형과 42형 ‘보급형 디지털TV’를 선택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슬룸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 포럼 워크숍 및 언론상 수상식’에 참석한 유명주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공적 영역과 산업 영역, 이윤까지 모두 시장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열어준 방통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결국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위한 공적 재원과 요소(전파, 수신료 등)를 모두 시장으로 포섭해 콘텐츠 경쟁력 우위를 살려 광고시장에서 프리미엄 광고 지위를 유지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논리를 만들었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일관된 미디어 정책의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디지털 전환 성공 - 문제와 해법은?

새로운 방송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며 다양한 관련 정책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정책지 <방송기술저널>은

129호부터 134호까지 6편에 걸쳐 '2011 방송가 핵심 키워드를 읽는다' 특집을 신설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2012년을 맞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정책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강해 나가야하는

방송정책을 소개하고 진단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 첫 번째 순서는 '디지털 전환 성공-문제와 해법은?'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특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그 맥을 짚어내다

디지털 전환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문제 그리고 해결을 위한 난상토론이 격하게 벌어지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행동'만이 남은 시점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년을 맞아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그 중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현재 관련 현안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방송사와 가전사, 그리고 지역의 디지털전환지원단체와 손잡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현황을 짚어보면, 2011년 10월 수도권부터 디지털 방송을 개시한 이후 2006년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이루어진 이후, 2008년 12월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했다. 그리고 2009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0년 단양, 울진, 강진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측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자. 2011년 6월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KBS의 경우 제작시설 전환율이 68.6%, 송신시설 중 방송국이 100%, 중계소가 40.9%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2010년 109억 원에서 2011년 250억 원을 투자해 관련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특집에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현안 1 - 시범지역, 문제는 없는가?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기 전, 가장 최근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제주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완벽한 성공'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방송기술저널>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직접수신 아날로그 TV 보유 세대가 19,519세대(제주지역세대의 9.0%), 공동주택 358개 단지, 65세 이상 노인 66,706명(11.7%)이며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이 다른 내륙지역보다 양호한 상황에서 직접수신 19,519세대(전체 세대의 9%) 중 20,800여 세대에 대한 지원을 했으며, 이는 직접수신세대 대비 106.9%의 성과다.

또한 방문기술지원은 6,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원세대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컨버터 보급이 2,873세대, 일반세대 컨버터 보급은 10,891세대, DTV 구매보조 310세대, 공동수신설비지원 6,786세대이다. 위 실적으로부터 평가한다면 이미 정부지원은 100%이상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의 성과일 뿐이다. 콜센터의 경우 인원보충이 어려워 응대대기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 가구가 유선방송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즉 지원은 이루어져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디지털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전환 시기를 약 4개월 연장한 사례도 있다.

현안 2 - 채널 재배치

작년 12월 15일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강진에서는 사상초유의 'TV 끊긴'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엄밀히 말해 TV가 끊긴 것이 아니라 직접수신 가구에서 채널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 시청불능 사태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직접수신 가구의 90% 정도가 TV를 못보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위시한 디지털 전환 지원단들이 사력을 다해 채널 재배치 지원을 나섰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강진이 12월 15일 6시를 기점으로 채널 재배치에 들어간 게 발단이 됐으며 디지털 전환이 끝난 지역의 경우, 2~6번까지 사용하던 채널을 14~51번까지만 사용하도록 한 방통위 규정에 따라 송·중계소 채널 재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TV를 보기 위해 '채널 재설정'을 해야 했지

만 직접수신 가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많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채널 재배치 기간을 내년까지 정해둔 상태다.

현안 3 - 도대체 안테나와 컨버터는 어디서?

디지털 전환을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마무리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개인이 컨버터나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에 최대한 접근성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안테나와 컨버터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디지털마당'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확인결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하며 정부에서 가전사가 TV를 판매할 때 안테나를 함께 비치해서 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논의 중'이다.

작년 '2011 방송기술컨퍼런스' 당시에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가를 비롯한 실생활 가까이 있는 모든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안 4 - 디지털 난민 발생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전국의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는 97만을 넘는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면 약 10~20%에 해당되는 10~19만 가구가 방송을 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울진 및 강진 시범지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아날로그 송출 당시 미전환 가구는 20%에 육박했다. 대대적인 '디지털 난민'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이유다.

현안 5 -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가능해?

방통위는 현재 일률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2012년 12



월 31일 새벽 4시에 전국의 송출탑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12월 흑환의 추위에 3인 1조 한 팀이 전국의 모든 송출탑에 올라 같은 시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안 6 -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현재 방통위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중점적으로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사업에 있어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대상자의 파악여부와 안테나 수신 및 컨버터 설치에 관련된 시공업체의 투명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대상을 '일반적인 지원'으로 전환했을 때이다.

만약 지원대상을 '일반'으로 그 범주를 넓힐 경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기존 디지털 전환 예산으로 책정된 1,04억 원에서 더 늘린다는 복안이지만 일본의 경

우약 15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부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정책에서 탈피, 직접수신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보고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현안 7 - 재산권 침해 논란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김빠지는 이야기가 많지만, 만약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날로그 TV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법적인 조치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안 8 - 난시청 문제, 주파수 문제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현재도 난시청 문제가 방송가의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난시청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진영에서는 전환 이후 회수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는 물론 뉴미디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실정이다.

사실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지역을 파악하는 것조차 현 상태로는 무리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는 디지털 난민,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송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디지털 전환은 문제해결의 '키워드'

2012년은 방송역사에 있어 제3의 격변기라고 불린다.

이 땅에 '방송'이라는 매체가 생긴 이후로 제2의 격변기인 컬러 방송을 거쳐 새로운 방송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디지털 전환', 즉 제3의 격변기인 것이다.

그리고 방송기술인들은 이러한 영상의 패러다임이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의 한 중간에 서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두의 지혜가 하나로 모일 때다.





방송기술 희망뉴스 NEWS

2012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방송기술저널>은 이번 지면을 빌려 모두의 가슴에 벅찬 희망과 미래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동시에 방송기술인들이 올해 가장 듣고 싶을 법한 '희망뉴스'를 선정해 소개하려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듣고 싶은 '희망뉴스'

비록 '만약에'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희망뉴스에서 소개한 내용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본다.

1

희망뉴스(2월 중순)

**방송통신위원회,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2013년 이후로 연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명을 받아 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을 내렸다. 이날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의 발전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대승적인 결론 아래, 그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협회 및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대로 해당 주파수 할당 결정을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2013년이 되면 디지털 전환 후 해당 주파수의 활용방안을

그동안 친통신위원회라는 오명을 받아 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을 내렸다.

이날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는 공공의

방송에 할당하는 것으로 일차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그동안 방통위에서 흘러나오던 40MHz 통신 우선 할당설도 완전히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그동안 갖은 여론전을 벌이며 해당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던 통신사들은 일제히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주파수를 자사의 이기주의로 차지하려 했던 과오를 반성한다"며 "부디 해당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는 물론 다가오는 뉴미디어 발전에 잘 활용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들은 "주파수를 마구 낭비해 데이터 트래픽 문제가 심해지자 기술적인 문제도 이를 해결하거나 데이터 전송량을 콘트롤하는 방안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뒤 "2004년 정부의 잘못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인해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치 전 세계가 700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할 것처럼 여

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한때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를 통신에 분할 할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개발독재 시절에 많은 '업자'들이 해오던 소위 '알박기'를 주파수 분야에서 시도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음을 시인한다"고 전하며 동시에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에 228MHz라는 터무니없는 할당을 결정했던 전 과정을 공개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밀실행정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해당 주파수를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 할당 결정하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이모 기자와 화해의 술잔을 기울인 뒤 세종로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후문이다.

2

희망뉴스(2월 하순)

**재송신 문제 극적타결, SO
"조건없이 저작권을 인정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극한의 대결을 펼치던 지상파, SO 양측은 결국 SO들이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거센 주장에 가까스로 현실감각을 찾은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SO들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조건없이 인정하며 최초 논의되었던 280원은 물론, 그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해결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격적인 의견개

진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많다. 각 지상파 방송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며 절대 SO들의 주장처럼 지상파가 '유료방송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SO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각 PP의 프로그램과 지상파 방송을 한데 묶어 가입자에게 '판매했다'는 개념인 만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한 어필을 한 것도 이번 사태해결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3

희망뉴스(5월 초순)

각 방송사 기술인력 현실화

그동안 비현실적인 인력 운용으로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었던 주범인 '방송사 기술인력 부족'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다.

각 방송사 사장단은 물론 정부부처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방송기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증원을 통한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KBS, MBC, SBS, EBS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역방송 및 종교 방송 등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술인력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기술인들은 잦은 교대근무와 야근, 그리고 혹독한 작업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왔지만 그 누구도 부족한 기술인력의 보강

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심지어 PD나 기자 등 일견 화려해보이는 동료들 뒤에는 항상 방송기술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듯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날로 발전해가는 방송기술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방송기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통해 이번 기술인력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복수의 관계자는 "각 방송사 모두 현 기술인력의 1.3~1.5배 정도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뽑을 예정이며 2015년까지 현 기술인력

의 2.5배에 달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적인 문제는, 방송기술인들이 현재 전세계 방송 기술 분야를 완전히 장악할 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글로벌 방송시장 사업의 수익으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술인력 현실화로 세계 방송시장의 기술선도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지방의 모든 방송사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서 벗어나 더욱 질 높은 방송환경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4

희망뉴스(7월 초순)

**다채널 서비스-
직접수신을 세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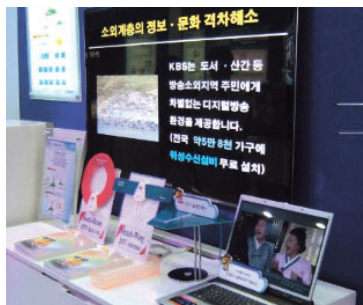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불리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지금까지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각 방송사들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수신이 가능한 TV 안테나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만들며 판매에 열을 올리자 직접수신비율은 상승

하기 시작했고 방통위가 송신시설에 선투자한 지상파 방송사에 다채널 관련 사업권을 전격적으로 부여하자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메카가 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채널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물론, 지상파를 보기 위해 난시청 지역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유료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 모두 지상파 다채널에 환호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직접수신률은 순식간에 70%대로 뛰어올랐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편 SO들은 그동안 직접수신을 방해하고 유료방송으로 사람들

을 끌어들이기 위해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도 TV가 안 나온다고 속여가며 자신들의 상품을 판 과오를 반성하며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자신들도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희망뉴스(7월 하순)

**방통위,
"모든 결정에 반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주파수 현안에 대해 견여한 입장을 보인 방통위는 이날 전격적으로 "모든 결정에 반성한다"는 성명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방통위는 성명서에서 "미디어 날치기 악법을

통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은 애초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온갖 특혜를 몰아주며 무리한 방송정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전한 뒤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는 보수매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방송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라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벌써 2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운영난으로 문닫은 지금, 특혜를 퍼 줬도 해당 매체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2개의 종편도 조속히 운영정지

를 시켜 올바른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힘쓰고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무리한 광고요구를 일삼은 행태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외에도 "주파수 경매를 강화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점을 깊게 반성하며 재송신 문제에서도 효과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 거기에 미디어랩과 언론자유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등 모든 결정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6

희망뉴스(11월 중순)

디지털 전환 '대박 예감'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사업이 대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책상에 앉아 문서만 검토하며 탁상공론을 퍼던 방통위가 전격적으로 해당 권리를 방송사들에게 넘긴 후,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나간 것이 주목했다는 평이다.

특히 보다 완벽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방송기술인들의 의견을 중용해 디지털 전환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안테나 및 컨버터

구입, 그리고 설치 문제와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되기로 최종 합의되어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한편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술자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채널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전환 벤치마킹 붐'이 발생하

며 시범사업 지역이던 울진 및 강진, 제주도 등에는 각 나라의 디지털 방송 전문가들이 몰려드는 한편 수려한 자연관광이 더욱 인기를 끌어 해당 지역은 때 아닌 외국 관광객 특수를 맞고 있다.



7

희망뉴스(12월 하순)

**<방송기술저널>
'가장 인정받는 정책전문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행하는 <방송기술저널>이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책전문지로 꼽혔다.

특히 실제 방송기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끊임없는 탐사취재, 그리고 내실있는 기고문 등은 외국의 주요 정책지들과 견주어도 손

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월간 방송과기술>은 '가장 인정받는 전문월간지'로 이름을 올렸다.

희망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현실은 의외로 꿈보다 날카로운 법이다. 그러나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리고 희망뉴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기분좋은 이야기인 것이다. 지금 소개한 이 희망뉴스가 현실의 '진실뉴스'가 되길 기원해본다. 새해니까.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좋은 법이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2 壬辰年 신년사



박 승 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195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날로그 TV방송 전파가 발사된 지 56년이 되는 해이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흑룡의 해에 연합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완전한 디지털 전환과 난시정 해소를 위한 700MHz 주파수 사수와 관련해 연합회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성원과 뜨거운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위기를 타개하고 급변하는 방송기술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방통융합환경에서

차세대방송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사의 유능한 연합회원들로 구성된 뉴미디어 연구반을 구성하여 미래 방송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는 주파수 사수활동을 통해 우리의 자력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항상 방송기술발전에 대해 갈망하고 제안하고 참여하면 그에 맞는 산출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됩니다. 차세대방송기술 관련하여 세상에 자국을 남겨 주십시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언제나 가까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지나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연합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연합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은 어찌보면 방송기술인들에게는 투쟁으로 점철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전국 규모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점차 현실화 되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연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얽은 술수는 점차 가슴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회원분들의 노력으로, 방송진영에서 처음으로 주파수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전쟁의 불씨를 당겼으며, 계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날로그 종료 및 디지털 전환사업 역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지상파 방송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생명체입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투기로 새해를 더욱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주파수 전쟁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채널 재배치와 다채널 디지털방송까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송기술인의 앞에 놓인 과제를 피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지난해보다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과 투쟁으로 연합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방송기술의 미래를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유 호 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



최 응 식
MBC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2011년 다사다난의 한 해를 뒤로 하고 2012 새해 임진년, 변화난축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은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희망 못지않게 DTV전환, 주파수 재배치 등 우리 방송기술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련과 변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송기술인이 합심해서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듯이 2012년 역시 모두 다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봅니다.

지난해 방송기술인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진년 새해 다시 힘을 내서 서로서로 손잡고 열심히 함께 뛰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홍 구
S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방송기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상파 방송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송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한 지상파 방송의 위축은 우리 기술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방송인에게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의 700MHz 대역 주파수 장악시도는 디지털 방송전환과 차세대 방송진화를 어렵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주고 있는지 또한 믿음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좋은 시절의 구태연함으로 인하여 직종간의 간극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이 크고 중할수록 상호신뢰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믿음을 주고 받는 신명나는 흑룡의 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김 경 수
EBS 기술인협회 회장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기술인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힐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켜보면 신묘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고 맞이했지만 2011년 말미에 700MHz 주파

수의 할당 문제로 인한 가두 투쟁과 최근의 김정일 사망 등으로 아쉬운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올 임진년 새해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종편 문제뿐만 아니라 각 회원사들의 위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방송기술에 있어 기술표준도 중요하지만 안팎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 방송기술인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분발하여 모두 합심하여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기술인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최 영 학
C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사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종편채널 개국, 700MHz대역 주파수 재할당 문제 등 방송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방송광고시장의 파고는 방송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 출범을 시작으로 촉발된 광고시장의 경쟁이 각 방송사의 광고영업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까지 개입된 복잡한 상황에, 경기 침체와 한미FTA로 인한 영향까지 생각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급격한 방송계의 변화 속에서 방송기술인의 지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최선인지 속 시원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아무튼 쇼는 계속 되어야 하기에 가슴의 불안과 고민을 묻어두고 올 한해 또 다시 무대 앞으로 뛰어나갈 여러분을 격려하고, 최선을 향한 부단한 도전을 뜨겁게 성원합니다.



박 선 우
YTN 기술인협회 회장

임진년이 밝아 왔습니다. 흑룡의 비상처럼 여러분들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YTN입장에서 보면 2011년은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 중 가장 염려되었던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이로 인한 인력유출, 방송 제작환경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많이 고조되었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기대도 됩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어선지 올 한 해는 어떠한 이슈들로 가득 채워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전의 저회 방송사들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주체로 기득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지하듯이 방송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 한다면 우리는 방송의 주도권을 놓칠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 변화의 주체로 설 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 우 석
O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을 뒤로 하며, 또 다시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러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 기존의 방송사들의 입지도 좁아졌으며, 지나친 경쟁구도로 치닫고 있는 방송환경으로 인해 방송기술인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기술인 한 분, 한 분에게 지면을 빌어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보합대화라는 말을 가슴에 되새기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방송기술인들도 지금의 팍팍해진 환경에만 얽매이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배움과 소통을 통해 소통과 상생의 미래를 함께 갖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 중 식
KNN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파수경매, 종편출현 등으로 지상파방송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중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상파방송의 핵심가치는 보

편적 무료방송이었지만, 미래의 지상파방송이 구현해야 하는 가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태껏 파상적이고 위력적인 도전이 있어도 방송기술인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과 방식에 대하여 먼저 고민하고 먼저 도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선도해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우리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회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대 호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인협회 회장

연말연시에 누구보다 바빴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원 여러분들의 땀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11년을 뒤로해보니 회원사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급변하는 방송과 통신환경에서의 적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

는 방송환경에서 어렵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도 또다시 한 해가 밝았습니다. 또한, 종편의 등장과 2012년 DTV전환 등 올해 임진년도 숨가쁘게 달려갈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큼 다가온 2012년 임진년은 60년만에 한번 온다는 흑룡의 해로,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함한 상상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임'을 뜻하는 '흑'이 더해져 흑룡의 해는 그 어느때 보다 길한 해라 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흑룡의 기운을 가지고 힘차게 상승하기를 기원드리고, 연합회원 댁내에도 흑룡의 기운이 내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신 규 봉
TBC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지상파 방송사에 있어 작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괴물의 출범,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저작권료협상, 700MHz주파수협상,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지상파실시간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환

경이 조성되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올해 내부적으로도 DTV중계소, DMB중계소 추가구축, HD중계차 도입 등 많은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어 힘들고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했던가요? 올 한해에도 지상파 방송환경은 힘들고 불투명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정 일
ubc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2011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또 저물고 60년만에 돌아온 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군요.

용은 용기, 희망, 비상을 흑은 왕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흑룡의 해에 재년을 갖고 싶어 작년엔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또한 우리 방송기술인의

바램대로 올 한해에는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는 길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에 치러지는 대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방송이 상업적 논리나 무한경쟁 체제에 보호없이 노출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올 한해도 파이팅하시고 각자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살다보면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웠다 서로에게 미소를 건낼 수 있는 또 한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 진 념
G1강원민방 기술인협회 회장

시간은 왜 게으름이 없을까요?

냉정한 시간은 과거를 삼키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데 정작 돌아본 한 해는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기술은 거짓이 없습니다. 기술은 시대의 흐름에 변화를 주도하고 진화의 리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에 반하여 자율경쟁 구도와 주파수할당 문제, 미디어업의 모호한 방향은 어떠한 이유

이던 간에 공정한 프로그램의 품질과 다양성을 퇴색시키고 있으며, 시청자의 볼 권리마저 이용과 권력의 테두리 안에서 저울질되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2012 임진년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송기술인들이 방송의 질적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기술인으로써 지역성 구현과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나뉘 해봅니다.

올 한해도 방송기술인들의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 정 룰
KBC 광주방송기술인협회 회장

2012,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이던 늘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다 하고, 희망찬 새해맞이를 합니다. 빛고를 無等山에 모두의 희망처럼 백설이 장관입니다. 마음이 확 트이고, 온갖 잡념을 잊게 합니다. 신을 달아서인지 등산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평안합니다. 방송, 군무, 가정과 직장, 나라.... 걱정과 근심은 잠시 접고, 산으로 바다로 잠시 켜들

내 보시면 어떨까요?

고생은 방송기술 사랑의 열정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보람을 차근차근 쌓아 나갑니다. 누군가는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키우려 하듯 기술은 방송의 처음이자 끝이고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미디어 빅뱅시대! Smart 미디어 시대! 방송기술인 마음까지 Smart 하시면, 우리의 방송기술 영역과 Power는 더욱 넓어지고 튼튼해 질 겁니다. 변화와 융합의 시대, 늘 소통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한다면 기술의 위상은 더욱 빛나고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壬辰年은 변화무쌍하고 예상치 못하게 급변하는 혼란시기라 합니다. 기술인답게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고, 가정과 직장에 화목과 발전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 승 웅
BBS 기술인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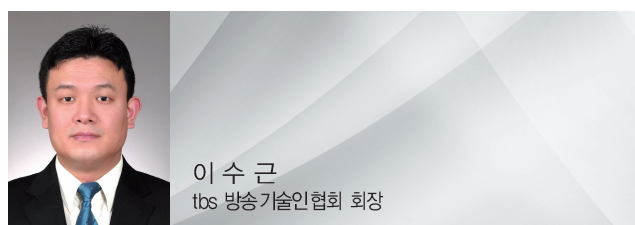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방송기술인협회원 여러분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기술표준들을 제정되고 관련된 정책들이

우후죽순 마구 튀어나오는 소리 신기술의 격동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주한 시대에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서있는 듯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방송전환이라는 커다란 이벤트가 있고, 그에 따른 700MHz 주파수 할용문제, 종합편성채널 방송의 본격적인 방송진입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커다란 변화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디어업의 출범은 BBS,PBC,CBS,TBS 등과 같은 종교방송사(군소방송사에게는 방송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

두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의 다양성 제고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통융합의 시대에 우리방송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은 IT기술과 방송기술을 접목시키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에 따라 통신기반의 미디어 시장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기술인들의 다방면에 걸친, 경쟁력 있는 능력향상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 군
t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영화제목과 같은 2012년 임진년(壬辰 年) 흑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가 좋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좋지 않은 기운을 우리 선조들은 좋은 뜻을 담아내고, 좋은 기운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도 방송가에는 다양하고 많은 이슈가 자리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항상 협회원들이 자리를 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구슬땀을 흘릴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도모할 원동력의 원천 또한 바로 협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의 다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항상 스마트한 자식을 위해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의 주도자로서 자부하는 방송기술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방송기술인들 모두가 용의 해에 용처럼 웅대하고 멋진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이 자리를 빌려 소원해 봅니다.

협회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품안에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 민 구
한신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새로운 디지털 라디오 시대를 소망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지상파아날로그 TV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아날로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점차 고조될 것이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란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라디오가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는 방송으로 디지털 라디오 방송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세계 디지털 라디오 전송방식에는 유럽형 전송방식과 미국형 전송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Eureka-147 프로젝트〉로 시작한 유럽형 디지털 방송인 DAB/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은 아날로그방식인 FM 라디오를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압축해서 방송하는 디지털 방송서비스이다. 아울러 AM 전송방식을 기반으로 발전한 DRM/DRM+(Digital Radio Mondiale)는 아날로그 AM/FM 라디오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유럽형 디지털 라디오 방송 표준으로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고품질의 오디오 서비스와 교통, 증권 등 다양한 부가데이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라디오와 연결 오디오 기술의 글로벌 기업인

프론티어 실리콘은 DAB/DAB+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해외 라디오와 네트워크 오디오를 연결하는 디지털 오디오 솔루션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HD-Radio(High Definition Radio)는 미국 디지털 지상파 라디오 방송 서비스 방식으로 CD수준의 고품질 음악 방송과 날씨, 교통 정보 등 데이터 방송을 실시 중으로 최근에는 FM 대역에서의 다채널 방송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국내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추진 현황으로 지난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라디오 도입추진 분과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라디오 전송방식에 관한 비교실험방송 결과를 바탕으로 전송방식 선정과 전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 도입 시기에 대해 KBS는 조기전환, MBC/SBS와 종교방송(CBS 등) 및 기타 사업자는 조기전환의 반대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 라디오 전송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KBS는 DAB+, MBC는 HD-Radio, SBS는 DRM+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송 사업자간의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진(전자부품연구원 등)은 유럽의 차세대 디지털라디오 방송 표준을 적용한 첫 디지털라디오 수신기인 DRM/DRM+수신기술을 적용하여 AM/FM 대역에서 유럽형 디지털 라디오 수신을 분석하는 분석장비(Analyzer)와 USB 타입의 수신기를 개발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장비전시회(IBC 2011)에서 선보였다.

이러한 DRM/DRM+방식은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과 유럽 등에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 표준으로 채택되어 DAB 및 DRM 수신 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과 단말기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의 새로운 방송단말기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시장은 차량용 디지털 라디오 단말기를 중심으로 2010년 18억 달러에서 유럽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매년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DAB/DRM/HD-Radio의 통합 칩 개발과 통합 수신기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용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라디오 단말기 산업의 발전 전망과 이미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제작 장치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디지털 전송장치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VHF 채널의 '광개토 플랜'과 같은 주파수 정책으로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장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정부가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수신율과 주파수 효율이 높은 전송방식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또한, 디지털 라디오의 고음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방송기술의 개발을 통해 지역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정취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디지털 라디오 시대를 개척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 콘텐츠 외주제작 환경 개선

임 정 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인텔 CEO 폴 오텔리니는 2010년에 한 연설에서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듯 TV도 스마트TV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가전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모든 콘텐츠가 TV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사키 도시나오는 그의 저술 <신문 텔레비전의 소멸>에서 “차세대 STB를 쓴 기업이 틀림없이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최강 플랫폼이 된다. 이 플랫폼이 나타나면 종래의 방송국은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여 플랫폼에서 내려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텔레비전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몇 년 앞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직후인 2007년에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전통적인 개념의 TV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외주제도로도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플랫폼 파워의 위축뿐 아니라, 콘텐츠 지배력 약화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파워의 위축은 무엇보다도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부터 시작하였다. 낯선 코리아의 최근 자료를 참고하면, 스마트폰 도입 이후 텔레비전과 PC의 이용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트 서프의 말처럼,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텔레비전이 가능해졌고 텔레비전의 개념조차 변화하였다. 또한, 최근 몇몇 PP채널은 시청률에서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능가하기도 했고, 종편PP도 지상파 방송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쟁자는 크게 증가했다.

거기다가 전채광고시장과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작년 11월말부터 시작되어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지상파 방송 재송신 완전중단 사태까지 갔던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채널사용료 분쟁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케이블 방송의 플랫폼 파워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파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파워는 유지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지배력의 점차적인 약화라고 보는 견해와 N스크린 시대에 지상파 콘텐츠 파워가 강

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전자는 최근의 빈번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저작권 귀속 논쟁, 제작주체의 다원화, 콘텐츠 유형과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후자는 지상파 방송사는 킬러 콘텐츠를 통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고,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의 크로스 디바이스 통합(cross-device integration)을 통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외주제도 논쟁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는데, 방송사와 제작사의 갈등에서 연기자 조자가 제기한 외주제작사의 미지급 출연료 문제, 제작 스텝들의 작업여건 악화 등의 문제로부터 확대되고 있다. 연기자들과 제작 스텝들은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상파 방송사는 이 문제의 책임이 일부 부도덕한 제작사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주제도에 있다고 보았고, 제작사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방송사에 있다고 보았다. 쟁점이 좀 확대되기는 했지만, 외주제도 논쟁의 본질적인 면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외주제도가 지상파 제작여건을 악화시키고 수익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비대칭적 규제들 중 하나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의 입장은 외주제도는 제작주체의 다원화로 다플랫폼 환경에 대한 대응이며, 합리적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콘텐츠 상품화와 사업화에 보다 강한 동기를 가진 생산주체가 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이해관계 혹은 방송콘텐츠 시장에 대한 철학에 따라 외주제작 환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크다. 과거와는 달리, 방송사, 제작사 외에

연기자, 제작 스텝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도 드러나고 있다. 저작권, 표준계약서, 제작환경, 간접광고, 협찬 등 사안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 다르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기술, 서비스 등에서 수직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변화에 대응해야만 생존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생존전략은 기업의 체질을 악화시켜 기업의 도태를 자초하게 된다. 둘째, 지상파 방송사는 N스크린 전략을 통해서 플랫폼 영향력을 회복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수성(守成) 전략으로는 플랫폼과 콘텐츠 영역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셋째, 방송뿐 아니라 사회전반이 다원화되고 있고 합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불합리적 거래관행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마련 및 공정한 시행이 요구되며, 그렇게 정착된 거래관행이 제작사와 종편채널의 거래 기준에도 광범위하게 참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적절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콘텐츠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제작사 및 유통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플레이어들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고 협업적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세해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방송 콘텐츠 외주관련 상황들을 풀어내는 실마리를 잡는 한 해였으면 한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 2012 제22회 국제방송 음향·조명기기전

22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5.29~6.1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예정)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kobashow.com

